

## 産學유착과 言學유착

康 俊 晚

(全北大 新聞放送學科)

民主主義의 한 가지 기본 원칙은 사회 諸 부문간의 견제와 균형이다. 그러나 독재 정권이 장기간 지속된 가운데 총체적 부패구조가 뿌리를 내린 나라에선 모든 사회제도가 결과 속이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겉으로 상호 독립되어 있는 것 같은 영역들도 그 속을 들여다 보면 하나로 뭉쳐 있다. 우리나라에선 정치와 경제, 그리고 권력과 언론이 그런 관계를 형성해 흔히 '政經癒着'과 '權言癒着'이라는 생활 용어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사회 諸 세력간의 연대 구조에서 大學은 어디쯤에 속해 있는 것일까. 과연 대학은 사회 諸 부문으로부터 독립돼 자유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사회적 位相을 감안할 때에 그런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일환으로 '산학유착'과 '언학유착'이라는 개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산업계와 학계가 상호 협조하여 실무와 이론의 조화를 꾀하고 더 나아가 결합효과를 얻고자 하는 産學協同은 적어도 자연과학과 이공계 분야에선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선 어떨까. 물론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일부 학과 또는 일부 연구 주제의 경우엔 산학협동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 학계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산학협동의 양상은 산학유착이라고 불려야 옳을 만큼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산학협동이란 말이 좋아 산학협동이지 그 실상은 학계가 산업계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계나 학계 모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과 체계화를 위한 연구라면 학계가 산업계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별 문제될 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인문사회과학의 경우엔 價値 判斷을 요구하는 종류의 연구와 세미나 개최에도 산업계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여기서 산업계란 정치학과의 경우 '정치산업'이 될 것이고 신문방송학과의 경우 '언론산업'이 될 것이다.

학계가 산업계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연구나 세미나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아닐 게다. 그러나 적어도 연구나 세미나의 議題設定이나 방향은 학계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실사 모든 것을 학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실 산업계는 흔히 학계에 자금 지원을 하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둘 뿐 학계가 제공하는 연구나 세미나의 결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산업계는 단지 학계와 평소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해 놓는 데에 관심을 둘 뿐이다. 한국적인 문화 풍토에서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집단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학계의 입장에서 산업계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건 분명하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관행처럼 간주되는 '副收入'이 전혀 없는 대학교수들이 넉넉지 않은 봉급만으로 생활을 하고 연구까지 한다는 건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산업계의 자금 지원이 아니라면 대학교수들이 대학원생들의 생계까지 부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을 해소할 길도 막막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다른 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학계가 공동 노력을 하는 것이 옳지 지금처럼 '현실'을 앞세워 별로 건전치 못한 산학유착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건 대학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까. 사실 산업계로부터의 자금 지원이라는 것도 모든 교수들에게 '접근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된 것도 아니다. 산학유착이라는 표현 그대로 산업계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은 대단히 '政治的'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한 산학유착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언학유착이다. 그러나 언학유착은 다른 종류의 산학유착과는 달리 학계의 특별한 의도없이 우리나라의 왜곡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시장의 구조와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묘하게도 대학의 내용은 대단히 부실하지만 대학 인구의 규모를 포함해 대학의 외형적 규모는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당연히 대학이 국민의 일상적 삶에서 누리는 권위도 매우 크다. 대학입시 과정에서 잘 드러나듯이, 대학은 계층 상향 이동의 유일한 희망이다. 또 대학교수의 대규모 정·관계 진출이 잘 보여주듯이, 대학은 테크너크렛의 '에비군'이다. 요컨대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그 본연의 기능보다는 부수적인 기능에 의해 그 正體性이 규명되는 제도인 것이다.

대학이 누리는 그런 기형적인 특혜는 대중매체가 지배하는 知識市場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수가 아니고선 지식인으로 행세하기가 매우 어렵다. 신문의 외부 칼럼니스트는 거의 대학교수다. 하다 못해 대학신문까지 필자가 대학교수일 것을 요구할 정도로 대학교수는 대학이라는 조직의 後光을 업고 우리 사회의 지식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직업을 얻기 위한 '투자'에 전주어 볼 때에 대학교수의 임금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전망도가 매우 높은 것도 그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그건 마치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온 국민적 피해의식이 관·검사라는 직업의 사회적 위상을 인플레이션시켜 놓은 것과 비슷하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 누리는 대학교수의 특권은 유감스럽게도 대학교수를 商業的인 언론이 지배하는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시장 질서에 편입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즉,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대학교수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기존 시장 논리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상업적 고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엘리트 매체'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그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대학까지 흡수해 비대해진 언론의 독점력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매우 다양한 종류의 '엘리트 매체'들이 생겨나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따져 보는 問題意識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